▶목 차◀

Ⅰ. 투자 여건 ····· 5

Ⅱ. 투자유치 제도 ····· 8

Ⅲ. 법인 설립 ····· 21

Ⅳ. 지사(Branch) 설립 ····· 31

Ⅴ. 조세 제도 ····· 33

Ⅵ. 노무 관리 ····· 37

Ⅶ. 기타 정보 ····· 40

<부록> 투자 법령 및 관련 자료 ····· 45

성공적인 투자진출을 위한 TIP

원자재 공급기지 구축

브라질에서 생산 시설을 가동할 경우 원자재 부족으로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진출 시 안정된 원자재 공급기지를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

현지 업체들과의 제휴

단독으로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는 것보다는 현지 업체들과의 제휴를 시도하는 것이 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다. 현지 업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존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어 시장 진입이 훨씬 수월해 진다.

Ⅰ. 투자 여건

1. 투자 환경

■ 남미 최대시장

- 인구 1억8천9백만명에 달하는 거대한 내수시장. 국토 면적에서 뿐만 아니라 GDP 등 경제적인 면에서도 남미 최대임

■ 남미 진출거점

- 브라질은 남미 대륙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남미 10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최적의 남미 진출 거점으로 꼽히고 있음. 브라질은 1995년 1월부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과 메르코수르 관세동맹을 공식 출범시켰고, 멕시코와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안데스공동체(CAN)와도 FTA를 체결하여 적극적으로 시장 확대가 가능

■ 중남미 국가 중 제조업 기반 최고

- 중남미 국가 중 제조업 기반이 가장 발달되어 있어 부품조달이 수월하고 제조업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남미 인근국으로의 수출이 용이

■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 브라질의 주요 기간산업은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순수한 국내 기업들은 미약한 편. 따라서 한국 등 외국기업들이 진출해 시장에 진출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

■ 외국인투자에 개방적

-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외국인투자에 개방적이나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이지는 않았음. 브라질에 대한 투자는 미국과 유럽계 다국적기업들이 주를 이루며, 최근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진출도 활기를 띄고 있음

2. 주요국별 대 브라질 투자동향

- 전통적으로 브라질에 대한 주요 직접 투자국은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영국 등이었으며 최근 들어 네덜란드가 부상하고 있음. 2006년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은 187억 달러이며, 이 중 미국(19.9%), 네덜란드(15.7%), 카이만 제도(8.9%), 스위스(7.3%), 스페인(6.8%)이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독일 3.8%, 일본 2.9%, 호주 0.5% 등임

- 한국의 대 브라질 투자진출은 1996년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2004년 브라질 방문과 이듬해 룰라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이후 대 브라질 투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2006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총투자 신고액은 11억2,647만 달러(82건)이며, 순 투자 금액은 5억5,195만 달러(70건)로 제조업(5억9,791만 달러)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주요 진출업체로는 LG전자, 삼성전자, 포항제철, 삼성전기 등 대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진출은 미미한 실정임

<대 브라질 현지 투자진출 현황>

업체명	투자지역	주요 생산품목
삼성전자	마나우스	칼라TV, 모니터, 하드디스크
	깜삐나스	핸드폰
삼성SDI	마나우스	브라운관, TV 및 모니터부품(DY), 휴대폰용 LCD모듈
LG전자	마나우스	칼라TV, VCR, 전자레인지, DVD, 에어컨
	따우바떼	모니터, 핸드폰, 광저장 매체(CDR, CDRW)
포항제철	빅토리아	Pallet(CVRD와 합작)
동양크레디텍	상조제두스깜뿌스	TV브라운관용 부품
서울전자통신	마나우스	오디오용 트랜스포머, TV용 코일
동국제강	포르탈레자	슬라브
CJ	삐라시까바	라이신

자료원: 무역관 종합

Ⅱ. 투자유치 제도

1. 브라질의 투자유치 정책

-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외국인투자에 있어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주의할 점은 브라질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것임. 즉 모든 투자유치 정책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됨

  · 이러한 이유는 브라질이 원래 이민국가로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심이 덜 하다는 이유 외에도, 연방국가의 특성상 주(州) 간 투자유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

- 또한 연방제도의 특성상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 별로 외국인투자에 관한 정책 및 법규가 차이가 있어 각 단계별 혜택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브라질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우선적으로 연방정부의 투자 인센티브가 자신의 투자대상에 해당되는가를 확인하여 가급적 연방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 다음에 주정부에서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비교 검토하여 입주해야 할 주(州)를 확정해야 함. 주가 확정되면 실제로 회사 또는 공장이 입주할 시(市)와 지역은 주정부를 통해 선정.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작업은 아님

2. 외국인투자 제한 분야

■ 원칙적으로 브라질에서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반되지 않는 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특별한 규제는 없음. 예를 들어 투자 제한 분야에는 국내 항공운송업, 원자력·수력·지열 발전사업, 통신사업, 방위산업 등이 있는데, 정도의 차이이지 나라마다 어느 정도의 규제는 다 있음. 브라질의 경우 외국인투자의 금지나 제한분야는 80년대 중반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래 꾸준하게 감소 중임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된 분야>

분야	내용	기타
지하자원, 광산, 기타 광물자원 및 수력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투자를 위해서는 에너지 자원부(Ministério das Minas e Energia)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브라질 기업은 외국인의 통제하에 있다 하더라도 광산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광산업은 외국인투자 금지 분야였으나, 1996년부터 허 용됨
석유자원와 천연가스의 탐사와 개발	연방정부의 독점 사업분야임	연방정부의 독점사업권을 유지하고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한 양허를 통해 민간자본의 참여를 허용
항공·우주산업	연방헌법상 외국인투자 금지	
핵에너지 개발	연방헌법에 연방정부의 독점권 조항(제21조 23항)에 포함되어 있음	외국인 투자 금지
연안 수상운송업	브라질에서 건조되어 브라질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소유하고, 기업에 대한 의결권의 75%이상을 브라질 시민이 소유하는 경우로 제한함	Sunamam이나 해당기업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항만관리청(Capitania dos Portos) 의 사전허가 필요

분야	내용	기타
언론 분야 TV, 라디오 방송, 신문사 .잡지 또는 기타 발행물	소유나 경영에 대한 연방 헌법(제222조 1항)상의 제약이 있음 (신문, 잡지 등) 언론사와 라디오방송사 자본과 의결 주식의 최소 70%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브라질 출생자 또는 10년 이상된 브라질 귀화인에 속해야 함	즉 외국인투자는 총자본과 총 의결주의 30%까지만 가능하되, 브라질 현지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를 통해 할 수 있음. 그리고 방송이나 언론사의 경영과 출판물 제작에 대한 책임직은 브라질인 또는 귀화한 지 10년 이상된 사람만 맡을 수 있음
케이블 TV		외자는 의결권의 49%까지만 허용
농목업이나 삼림 소유 및 국경지대	외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님 그러나 이러한 산업에 종사하여 관련 토지를 소유할 경우 외국인의 토지소유에 관련된 규제를 받을 수 있음. 법률 제5709호(1971.10.7일)	이 규정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지방부동산(imóvel rural)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데 기업 간 합병이나 투자가의 변동, 이러한 결과로 국내 법인이 외국법인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도 적용
국내 항공운송업	제한규정	국내 항공사에 대한 외자참여는 의결권주식의 25%이상을 넘어서는 안됨. 임원의 3분의2 이상이 브라질 국민이어야 함
육상 화물 운송 (road cargo transportation)	육상화물운송회사에 대한 외자참여는 투표권 있는 자본의 1/5를 넘어서는 안 됨	회사는 주식회사(SA)의 형태여야 함

분야	내용	기타
금융업	중앙은행의 사전허가를 필요로 함	브라질 은행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을 가진 국가에 본점을 둔 은행, 금융기관은 브라질 은행과 금융기관의 의결주(voting shares)의 30%까지만 소유가 가능함(법률 제4131호/1962, 제51조)
우편.전보서비스	연방헌법에 연방정부의 독점 사업으로 규정(헌법 제21조)	
보험	보험분야(health plans)는 투자금지 분야였으나 1996년부터 외국인투자가 허가됨	보험감독원(SUSEPE)의 사전허가 필요. 주요 미국 보험회사들이 J/V형태로 브라질의 보험업계에 진출함
보건서비스 분야	연방헌법에서 외국자본이나 외국기업이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제199조 3항)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3. 투자유치 인센티브

■ 개요

- 브라질 정부는 광활한 국토개발과 지역별 균등발전, 국제 경쟁력 있는 전략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환영함. 그리고 이민국가의 특성상 국내경제에 외자의 존재를 이질적으로 보지 않으며 특별한 차별을 하지 않음

- 반면 국내에서도 지역, 산업마다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하기 때문에 굳이 외국기업의 투자와 내국기업의 투자를 구별하여 외국기업에 특혜를 주는 일이 없음. 따라서 브라질에서 말하는 투자유치와 투자 인센티브는 국내외 기업에 모두 해당되는 말임

- 일반적으로 외국인자본의 유치는 지방정부의 주(州)나 시(市)보다는 연방정부에서 더 관심이 있음. 국가장래를 위한 전략산업의 선정과 육성이 아무래도 연방정부차원에서 수립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산업육성에는 외국자본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임. 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전략산업의 육성과 정책이 정해지면 그러한 전략산업을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투자 인센티브와 지방정부의 인센티브를 국내외 기업들에게 제공하게 됨

- 따라서 브라질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은 자신의 산업이 브라질 연방정부의 산업육성 인센티브 정책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 확인한 후 자신에게 맞는 주정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함. 입지할 시는 주가 정해지면 주정부의 도움을 받아 선정을 할 수 있음

- 브라질 연방정부는 신기술 도입, 농축산업 개발, 수출증대, 고용증대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가장 환대해 왔음. 북동지역(ADENE), 아마존지역(ADA)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을 연방정부가 가장 우대하는 이유도 전통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경제개발 우선정책에 근간하기 때문임. 이러한 투자 인센티브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연방차원의 조세 인센티브가 주어짐

■ 유형별 인센티브

-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크게 수출기업, 특별 장려산업, 저개발지역 투자 등의 경우에 제공됨

● 일반적인 투자 인센티브

· 하이테크 분야, 정보통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기업이 연구개발에 수익의 5% 이상 투자하면 이를 소득세에서 감면해주고, 기술개발 관련 기자재 구매 시 공산품세(IPI)를 면제해주는 등의 세제 인센티브가 주어짐

● 산업별 투자 인센티브

· 브라질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제공 우선산업은 농업, 중공업, 제철, 조선, 화학, 제지, 어업, 임업, 관광업 등이며, 정보통신업종은 정보산업진흥법에 의한 인센티브를 받고 있음

● 지역별 투자 인센티브

· 투자 인센티브를 수혜 받을 수 있는 지역은 북부 아마존지역, 북동부 저개발지역,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수출가공무역지대(ZPE)로, 연방소득세를 10년간 면제해 주거나, 주(州) 유통세(ICMS) 일부를 융자해 주기도 함. 투자 장려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브라질 북동부은행(BNB) 등 지역개발은행의 중장기금융을 이용할 수 있으며, 우선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은 국가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으로부터도 차입이 가능함. 그러나 대부분 저개발지역으로 고급인력이 거의 없어 단순조립 산업 등에만 적합함

● 수출 장려 인센티브

· 수출가공무역지대(ZPE)에 입주한 기업은 수입관세, 공업제품세, 사회보장기금세, 금융거래세, 상인해상운송개혁세 등을 면제받으며, 원부자재의 수입 시 수입허가가 필요 없음

■ 정보산업진흥법(informatic law) 개요

- 2006년 9월 대통령령 제5906호로 시행령이 발표되었으며, 적용대상 품목은 IT 제품 전반이며, 브라질 전역에 적용됨

- 조세혜택 기간: 2019년까지

- 목적: 과학기술부가 IT 기술이나 제품의 국내 개발 및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소프트웨어의 개발도 포함됨

- 주요내용: 정보, 자동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 또는 생산하는 기업이 총 매출액의 5%를 브라질에서 정보기술(IT)의 연구 및 개발 활동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 인센티브를 받을 권리를 부여함. 연방정부의 공업생산품세(IPI)를 일정 기간 동안 감면해 줌

  · 이러한 조세감면은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데, 경제적 낙후지역인 북부, 북동부, 중서부 지역(여기에 마나우스 지역은 제외됨)에 투자하는 IT기업은 2014년까지 IPI를 100% 면제받고 나머지 지역은 95%까지 감면받음

  · 한편 기존의 법 규정이 R&D 투자액의 산정기준을 수혜기업 총매출액의 5%로 했었으나, 이번 시행령에서는 조세혜택을 받는 해당 정보제품의 판매액의 5%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비용절감이 될 수 있음

  · 신법은 브라질에서 PPB을 이행하여 생산되는 제품 중 제품개발도 브라질에서 하는 경우 조세 수혜 폭을 더 넓힘. 즉 남부지역에서 생산하는 경우 IPI 감면은 80%, 북부에서 생산하는 경우 95%로, 남부지역에서 개발하는 경우 IPI 감면은 95%, 북부에서 개발하는 경우 100% 완전 감면하도록 조치함. 이러한 감면율은 2014년까지는 그대로 지속되고 그 이후부터 2019년 완전 해제될 때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됨

  · 브라질에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제품과 외국에서 개발하여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제품 간에 조세특전의 차별을 두어 브라질에서의 제품개발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 이는 최근 다국적 기업들이 전세계적으로 R&D 연구소를 지역적으로 분산하는 경향이 있어 IT 인센티브를 통해 이러한 연구기관을 브라질로 유치하기 위한 것임

4.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 개요

-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가 위치한 서부 아마존 지역은 아마조나스(Amazonas), 아끄레(Acre), 혼도니아(Rondonia), 호라이마(Roraima) 등의 4개 주로 구성되어 있음. 각 주의 수도는 마나우스(Manaus), 히우 브랑꾸(Rio Branco), 뽀르뚜 벨류(Porto Velho), 보아 비스타(Boa Vista)인데, 이 중 마나우스는 동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음

- 법령 nº 356/68 와 법령 8.387/91을 통해 아마조나스 주 마나우스 시에 설치된 자유무역지대는 1990년 시장개방 이전까지만 해도 브라질의 최대 공업지대였으나, 원거리에 따른 물류비용과 경기둔화로 한동안 침체되어 있었음

- 그러나 2003년부터 경기 회복과 함께 마나우스 지역 투자도 활기를 띄기 시작, 2002년 총 매출액 91억 달러에서 2003년에는 105억3,000만 달러로 16% 증가한 이후, 2004년에는 139억 달러, 2005년은 190억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고용현황도 1999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05년 말 기준 총 근로자 수는 10만3,000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FM)는 공업, 농축산업, 상업 등 3개의 대형 전문 산업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업 단지의 경우 현재 각종 첨단 기술을 보유한 45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음

- 마나우스 지역(ZFM)에는 수입관세 및 공업세 등 세제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전기전자, 오토바이, 생활용품 등 관련기업들이 주로 진출해 있으며, 다수의 정보통신제품 업체도 입주해 있음

- 브라질 최대 수출자유무역지대인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의 조세 특혜 제도는 그 동안 두 번의 기한 연장을 거쳐 당초 종료 시기였던 2013년 보다 10년이 늘어난 2023년까지 발효될 예정임

■ 주요혜택

- 마나우스 지역(ZFM)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는 SUFRAMA와 SUDAM을 통한 연방인센티브와 마나우스주 상공관광국(SIC)을 통한 주정부의 인센티브, 마나우스시의 인센티브로 나눠짐. 100% 면세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며, 일반적으로 조세를 경감시켜주는 것이 원칙임

- 연방 인센티브: 수입세(Imposto sobre Importação – I.I.), 공산품세 (IPI – Imposto sobre Produtos Industrializados; Industrialised Product Tax), 법인소득세(IR – Imposto de Renda; Income Tax), PIS (SOCIAL INTEGRATION PROGRAM)와 COFINS (SOCIAL SECURITY FINANCING CONTRIBUTION) 등의 감면 및 수출세 (Imposto sobre Exportação – I.E.)의 면제

- 주(州) 인센티브: 주유통세(ICMS – State Service Tax)를 경우에 따라 55~100% 환급(tax credits)하는 방식

- 시(市) 인센티브: 일정 기간 건물토지세, 도시정화 및 공공물 보존료, 사업 허가료 등을 면제

5. 외국인투자 형태

브라질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법인형태로는 유한책임회사(Limitada: LTDA)가 압도적이며, 지사설립은 법적인 제약으로 거의 하지 않고 있음

■ 유한책임회사 (Company/ LTDA.)

- 2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각각 투자한 부분에 비례하여 책임을 지는 형태. 유한책임회사(LTDA)는 주식회사(S.A.)와 함께 브라질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인형태임

- 우선 유한책임회사(LTDA)는 자본 출자자들의 개성이 회사구성과 운영에 크게 반영되기 때문에 인적회사(人的會社)의 색채가 짙음. 따라서 회사 중요사항의 결정에 있어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제가 적용됨

- 또한 유한책임회사(LTDA)는 자본출자가의 책임은 자신이 출자하기로 약속한 출자금에 대해서만 한정되고, 출자가는 출자액에 비례하여 지분(Quota)을 분배받음

- 유한책임회사(LTDA)는 회사설립정관(Contrato Social/ Bylaws)의 등기, 즉 본점의 주소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설립을 완료하고 법인격을 취득. LTDA는 외국기업이 현지에 전액출자회사(wholly owned subsidiaries)를 원할 때, 소수 투자가간의 사업을 원할 때, 회사경영의 대외노출을 꺼릴 때, 초기 운영자금에 대한 제한이 있을 때 등 주로 투자가들 간에 긴밀한 투자·경영관계가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 형태임

- 유한책임회사(LTDA)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회사구성원이 있어야 함. 브라질법이 1인 회사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임. 또한 100% 외국인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지인이나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들은 100% 단독투자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1)둘 또는 그 이상의 법인, (2)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법인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개인투자가 (3)둘 또는 그 이상의 개인투자가로 지주구성이 가능함

- 브라질의 외국인법상 회사운영은 브라질 거주인(영주권자 이상)이 담당해야 한다는 법적 제약 때문에 만일 외국투자기업에서 유한책임회사(LTDA)경영인을 파견하려면 파견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영주권자를 경영인으로 지정해야 함

- 유한책임회사(LTDA) 설립을 위한 법정 최저자본금에 대한 규정은 없음. 그러나 만일 한국기업이 본사직원을 파견하여 현지법인을 운영하려면 영주권을 소지해야 하며,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연방이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소 5만 달러 또는 최소 20만 달러 이상을 중앙은행에 외국인 투자금으로 등록해야 함

- 회사경영인은 유한책임회사(LTDA) 설립시 꼭 지정되어야 하며, 반드시 브라질 거주인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함. 그리고 지주경영인이 회사경영을 대리 경영할 경우에는 가급적 별도의 위임장을 통해 대리경영인을 선임하도록 정관상에 조치하는 것이 좋음

- 유한책임회사(LTDA)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와 같이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를 설치할 수 있음. 지주들의 총회는 회계년도 개시일로부터 첫 4개월 내에 최소 1년에 1번은 개최해야 함. 총회에서는 전년도 회계결산보고를 검토, 승인해야 하고 필요시 이사 선임을 해야 함

■ 주식회사(Corporation/ Sociedade Anonima-S.A.)

- 2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된 법인으로 투자한 주식만큼 회사경영에 책임 의무를 가지는 형태

- 주식회사는 매년 회계결산(annual accounts)과 주주총회 회의록(minutes of shareholder's meetings)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움. 또한 주식회사는 회사수익의 5%를 법정적립금(legal reserve)으로 비축해야 함. 이러한 요구는 유한책임회사(LTDA)에는

없음.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LTDA)와 주식회사(Corporation)간의 법인형태의 전환은 절차가 간단하고 큰 비용이 요구되지 않음

-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발기인(외국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둔 2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필요하며, 발기인은 창립주주로서 응모 자본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

<법인형태의 비교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구분	유한책임회사 (Sociedades Limitadas-LTDA)	주식회사 Sociedas Anônimas-S.A.
법규정	· 민법(법률 제10406/02호)	· 주식회사법(법률 제6404/76호)
설립정관	· 설립정관 Articles of Association, Contrato Social	· 설립정관 By-laws, Estatuto
설립자본금	· 최소자본금 규정 없음 · 현금 또는 자산	· 최소자본금 규정 없음 · 주식종류 다양함 (보통주, 특별주 등) · 납입: 현금 또는 자본
영주권 발급	· 1인당 5만~20만 달러	· 1인당 5만~20만 달러
책임	· 주주책임은 응모자본에 한하여 유한책임. 납입되지 않은 자본에 대해 주주는 공동책임 · 경영자는 회사경영에 대한 책임	· 주주책임: 응모하여 납입한 주식에 한함
증권발생	· 발행금지	· 회사채, 증권 등
경영	· 경영이사 Executive officers (1인 또는 복수): 브라질 거주인 · 이사회 구성: 의무사항 아님	· 경영이사회 Board of Officers (최소 2인이상): 브라질거주인 ·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구성
결정	· 원칙: 과반수 · 예외(법규정): 정관변경, 회사매각, 분리, 해산, 종료시 3/4 의결정족수.	· 원칙: 대부분의 경우 과반수 + 1

<법인형태의 비교(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지점)>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지점
· 설립시 특별한 정부허가 불필요	· 설립시 특별한 정부허가 불필요. 단, 설립정관의 일간지 공고의무	· 설립시 연방정부의 특별허가 및 설립문서를 일간지에 공고의무
· 특별한 설립비용 없음. 일반적으로 외국어 서류의 공인번역 및 공증비용	· 일간지 공고비용이 추가됨	· 일간지 공고비용이 추가됨
· 등록기간은 3~10일 소요	· 약 15일	· 약 3~6개월
· 자본금은 QUOTAS로 분류됨. (별도의 지분증서 없음)	·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주식증서 발행가능)	· 해당무
· 지분양도 시 회사정관의 개정 필요	· 주식양도는 회사장부에 기록	· 해당무
· 회사설립시 최저납입금 납입의무 없음	· 회사설립시 설립자본금의 최소 10% 를 현금납입 의무	· 해당무
· 증권거래소 등록 불필요	· 증권거래소 등록	· 증권거래소 등록 불필요
· 법정 유보금 불필요	· 5%의 법정 유보금 적립 필요	· 적용 안됨
· 최저배당 의무 없음	· 최저배당은 순이익의 25% 요구	· 적용 안됨
· 감자, 해산 등 특별한 경우에만 공고	· 재무제표와 주주회의록의 일간지 공고	· 재무제표의 일간지 공고
· 브라질 국적기업	· 브라질 국적기업	· 모기업의 국적
· 지주회의록 작성의무	· 주주회의록, 경영진 회의록등 기업 장부의 작성의무	· 별도의 기업장부 불필요

Ⅲ. 법인 설립

1. 필요서류 및 절차

- 외국 투자기업 대부분이 선호하는 법인 형태는 유한책임회사(LTDA)와 주식회사(S/A)로 두 경우 모두 해당 지역의 아래의 과정을 거쳐 설립 가능
  1) 주(州)상업 등기소(Junta Comercial)-법인설립 등기, 법인등록 번호
  2) 연방 세무국(Receita Federal)-법인납세인 등록,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3) 법인명 구좌 개설
  4) 중앙은행-외자등록
  5) 주(州)세무국(Secretaria da Fazenda)
  6) 시청(Prefeitura Municipal)
  7) 노동부-주재원 비자신청

- 현지법인을 본사 파견 직원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고 동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에 설립자본금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소에 설립법인 등록, 중앙은행에 외국인투자 등록, 노동부에 영주비자 신청은 현지법인 운영을 위해 순서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설립과정이 됨

<유한책임회사 설립절차>

단계	설립절차	준비 서류	예상소요일
	(한국내 준비서류)		
1.	본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Certificate of Good Standing)과 변호사 위임장 준비	-위임장(예문) -본사등기부등본 또는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예문)	Day 1 (공증서 서명 공증과 브라질 영사관의 영사인증 필요)
2.	**(가)**상호조회 **(나)**현지설립법인의 대표경영인의 선정 및 주소선정 **(다)**현지법인의 설립정관 작성	상업등기소 시청에 주소 조회	당일 (회사주주는 최소 2인. 대표는 브라질 영주권자 이상)

단계	설립절차	준비 서류	예상소요일
	(브라질에서의 준비서류)		
3.	**(가)**변호사 위임장과 회사등기 증을 현지변호사에 전달. **(나)**위임장 공인번역과 문서 등기소에 등록 **(다)**외국개인투자가는 브라질 은행에 CPF, 외국법인 투자 가는 중앙은행에 CNPJ신청	위임장 본사 등기부등본 또는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개인납세 등록 (CPF) 법인납세 등록 (CNPJ)	Up to day 20
4.	현지법인의 설립정관 최종확정	현지법인의 설립정관 (예문)	Up to day 25
5.	연방세무국에 해외투자가의 법인납세인 등록신청: 개인투자가는 CPF, 법인투자가는 CNPJ 신청	소정의 신청서 회사증명서 공인번역된 회사서류 위임장	Up to Day 25
6.	현지법인의 설립정관을 州 상업등기소(Junta Comercial)에 등기하고 등기번호(NIRE)받음	소정의 신청서 설립정관 3 부 경영 책임자 영주권과 ("RG" 또는 "RNE") 개인납세등록증 ("CPF") 위임장	Day 26 (등기번호가 나오면 회사설립됨)
7.	연방세무국에 설립법인의 법인납세등록 "CNPJ" 신청	소정의 신청서 주상업등기소에 등기된 현지설립법인의 정관 지분권자 위임장	Up to Day 43 (CNPJ가 있어야 구좌개설, 구매, 임대계약 등 경제활동가능)
8.	은행계좌 개설	CNPJ 교부 후	Depend on the bank
9.	중앙은행에 전자 등록 (RDE) 신청	소정의 신청서 주(州)상업등기소에 등기된 현지설립법인의 정관 지분권자 위임장 주(州)상업등기소에 증명서	Up to Day 46 (RDE 번호가 있어야 투자금의 송금이 가능)

단계	설립절차	준비 서류	예상소요일
(브라질에서의 준비서류)			
10.	현지법인의 송금 등록	소정의 신청서 환전계약서	Up to Day 49 (중앙은행에 투자금을 등록) ⇒여기까지 대략 2~4천 달러 소요
11.	시, 주, 연방기관 등록 시정부-CCM 소방국 안점검사 주등록-Inscrição Estadual 사회복지국-INSS 피고용인 실직기금-FGTS	소정의 신청서 CNPJ 정관	Up to Day 60 (업체의 활동목적이나 범위에 따라 허가. 등록에 차이가 있음. 일괄처리 유리) ⇒ 대략 1천 달러 소요
12	SISCOMEX/RADAR	연방세무국에 신청	수출입 등 무역업에 필요 (2~4개월 소요) ⇒ 대략 5백~1천 달러소요
13.	회계사 선정	-	현지설립법인 회계장부의 상업등기소 등기 확인
14.	현지설립법인 피고용인들의 연방세무국 신고 (적용시)		
15.	주재원 파견의 경우 비자 발급 신청 (연방노동부 이민국)		(1-2개월 소요) ⇒대략 1천5백~2천 달러소요
16.	외국인 거주등록증 RNE (Registry of Individuals)를 신청하고 CPF(개인납세자 등록증) 를 신청		주재원이 비자를 받아 브라질에 도착하면 법무부 산하 연방경찰에 신고 ⇒ 대략 5백 달러 소요

주1) 외국에서 작성되는 모든 서류는 공증 및 브라질 영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아야 함.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브라질에서 공인번역사의 번역을 받아야만 유효

주2) 비용은 전문가의 인건비(fees)를 말하며 여기에 비용(expenses)이 더 들어감. 비용(expenses)으로 대략 1천~1천5백 달러 정도 소요됨. 변호사 사무실은 통상 시간당 보수(an hourly basis - 대략 1백~3백50 달러 사이)를 사용하는데, 이를 경험상 합산하면 limitada 설립에 변호사비로 약 4천 달러 정도 예상됨. 비용(Expenses)에는 telecommunications, official translations, reproduction, travel, lodging, translation 등이 있는, 통상 번역비와 등록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한국에서의 서류준비: 위임장과 법인등기부등본

- 브라질 현지법인명을 확정하고 상업등기소에 기존에 등록된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 브라질 현지법인의 설립정관을 작성할 것

- 브라질 현지법인에 출자하는 설립지주를 확정할 것 (법인명, 주소, 대표자 성명)

- 브라질 현지법인을 관리할 대표자(directors or officers)를 선정할 것.

  · 브라질법상 브라질 법인의 관리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파견되는 대표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임시대표를 지정해야 함

- 설립지주의 브라질 대리인의 지정

  · 브라질 현지법인의 설립지주가 외국기업이나 해외거주 개인일 경우 반드시 브라질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함. 이 대리인이 부재지주를 대리하여 설립정관에 서명하는데, 통상적으로는 변호사나 회계사를 통해 법인설립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지주의 현지대리인 역할을 수행

- 설립지주가 해외에 있는 기업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브라질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외국법인이 설립지에서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의 투자 법인이 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위임장 (procuração/ powers of attorneys): 설립주주가 해외에 있는 소위 부재주주(법인 또는 개인)인 경우에는 회사설립을 맡은 브라질 대리인(변호사)에게 현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장을 주어야 함. 위임장에는 등기소, 연방국세청, 중앙은행 등 관계기관에서 설립주주를 위해 대리할 수 있는 충분한 대리권을 명시해야 함

  · 한국에서 작성된 대리장은 공증사무소(Notary Public)에서 서명의 진위를 확인하는 서명공증을 받은 후 (notarization) 브라질 영사관에서 영사인증(legalization by the Brazilian consulate)을 받아야 함

  · 공증사무소에서는 위임장에 서명한 개인 또는 법인대표의 서명확인을 해주고, 영사관에서는 이러한 공증인의 서명을 확인하는 영사인증을 함

  · 주의해야 할 점은 위임장에 서명하는 법인대표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법인대표여야 하며, 회사정관에 회사를 대표하여 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 공증인은 위임장에 서명하는 자가 법인대표임을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함

- 법인등기부 등본 (articles of association of the quotaholder): 브라질 현지법인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설립지에 등기된 법인등기부의 사본. 영문으로 발급받는 것이 나중에 브라질에서 번역하기가 수월함

■ 브라질 현지법인의 임시대표 선임 및 주소 선정

- 회사설립 전에 회사주소와 임시대표를 선정해야 함. 회사주소는 회사설립을 대행해주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회계사 사무실의 주소를 임시로 사용하고 나중에 사무실 매입 또는 임대차를 통해 사무실을 구한 후 주소 이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함

■ CETESB의 환경허가

- 제조업체의 경우는 통상 환경허가(Licenciamento Ambiental)의 대상이 됨(법률 제997/76호). 환경허가에는 사전허가(Licença Prévia, LP), 설치허가(Licença de Instalação, LI), 운영허가(Licença de Operação, LO)가 있음

■ 소방서 안전검사(Vistoria do Im vel)

- 상파울로 주에 소재한 모든 건축물은 소방서(Corpo de Bombeiros)의 안전검사를 통과해야 만 입주허가서(Habite-se)를 발급받음. 소방서는 우선 건축프로젝트를 통해 안전, 방화시설, 탈출시설, 방화장비, 화재 탐지시설 등을 심사하여 건축을 허가하며, 건축물이 완공되면 현장방문을 통해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사전 허가된 건축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을 충족했는지를 점검

■ 회사명의 확정

- 유한책임회사(Ltda. 또는 Limitada)는 회사명에 반드시 Ltda. 또는 Limitada를 붙여야 함

- 브라질의 경우 회사등록은 주(州) 상업등기소(Junta Comercial)에서 하게 되어 있음. 그래서 등록된 회사 명칭은 해당 주에서만 보호를 받는데, 만일, 회사가 회사 명칭을 브라질 전역에서

보호받고자 한다면 특허청(INPI)에 상호(Marca; Mark)등록을 하여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상호결정 이전에 유사 상호 검사를 실시해야 됨

■ 설립정관의 작성

- 정관은 반드시 변호사가 작성 또는 검토해야 함. 정관은 반드시 변호사가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영세 기업은 이러한 의무가 면제됨

  · 변호사 및 증인, 투자자 전원이 서명한 계약서 (회사 정관: Contrato Social) 3부 준비

  · 서류 전체에 걸쳐 각장마다 증인 및 투자자 전원이 기재된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는 표시로 약식 서명함

- 설립정관은 경우에 따라서 주 상업등기소(Junta Comercial)에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지방위원회(Conselho Regional)의 허가(averbação)를 받아야 함. 예컨대 건설회사는 지방건축위원회(Crea)의 허가를 받아야 주 상업등기소에 등록이 가능함

■ 주 상업등기소에 법인등록(NIRE)

- 회사설립을 위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주(州)상업등기소(Junta Comercial)에 설립정관을 등기해야 함. 등기소에 제출하는 설립정관은 4부이며 모든 면에 약식서명(rúbrica)을 하고 마지막 면에 주주, 증인, 변호사가 정식서명을 함. 주 상업등기소에 등록하여 법인등기번호(NIRE)를 받으면 회사가 법적으로 설립된 것임

-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 법인 등록 서류 (Cadastro Modelo 1) 2부 작성
- 법인 등록 서류 (Cadastro Modelo 2) 법인 구성원 1인당 2부씩 작성
- 상업등기소 등록 요청 서류 (Requerimento Padrao da Junta) 작성
- 소속 그룹(초소기업(Microempresa) 또는 소기업(Pequena Empresa) 결정 후 등록 해당 그룹 등록 신청서 3부 작성
- 법인 구성원 전원(Cadastro Modelo 2에 기재된 모든 출자자)의 개인 납세 번호(CPF)와 주민등록증(RG)의 공증 사본
- 투자자 전원의 거주지 증명 서류 공증 사본
- 법인 본부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토지세(IPTU) 납부 서류 공증 사본
- 수수료 (Guia GARE codigo 370-0 및 DARF codigo 6621) 납부

■ 연방 세무국에 법인납세등록 신청 (CNPJ)

- 브라질의 모든 법인은 연방세무국(Receita Federal)에 법인납세등록(Cadastro Nacional da Pessoa Jurídica, CNPJ)을 하여 납세번호를 받아야 함. 이 법인납세번호(CNPJ)가 있어야 회사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음. 회사이름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은행구좌도 개설할 수 있으며 임대계약도 맺을 수 있고 자동차도 구입할 수 있음

-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 법인납세번호(CNPJ)등록 신청서(Documento Basico de Entrada: DBE) 2부 작성. 법인의 대표자가 서명 후 공증

  - 연방 세무국 법인 등록과 관련된 각종 서류 작성 후 디스켓에 저장. 서류 양식은 연방 세무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대리인이 등록신청서(DBE)를 작성할 경우, 위임장 원본 및 공

증사본 첨부 필요. 이 경우 FCPJ 서류는 법인 대표의 개인납세번호(CPF)를 기재함
- 투자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위임장 원본 및 공증사본 첨부. 주재국 내 브라질 영사관의 날인 필요. 공증 번역사가 번역한 서류만 인정
- 해당 지역 상업등기소(Junta Comercial)에 등록한 계약서(회사정관: Contrato Social) 원본 또는 공증사본
- 법인 구성원 전부의 개인납세번호(CPF) 및 주민등록증(RG) 공증 사본
- 법인 구성원 전원의 거주지 증명 서류 공증 사본
- 법인 본부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토지세(IPTU) 납부 서류 공증 사본
- 법인 구성원 전원의 최근 5년간 납부한 소득세(Declaracoes de Imposto de Renda) 내역. 신고대상이 아닐 경우, 소득세 면제 서류(Declaracao de Isencao) 제출
- 수수료(Guia DARF Codigo 6621) 납부

■ 은행 계좌 개설

- 설립법인이 법인납세번호(CNPJ)가 있으면 법인명으로 은행구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 현재 상파울루에는 한국외환은행이 외국환 거래업무를 하고 있음

■ 중앙은행에 전자등록(RDE)

- 외국인투자 등록은 인터넷을 통해 중앙은행(BACEN)에 직접 해야 함. 동 제도를 외국인 직접투자 전자등록(RDE-IED: registro declaratório eletrônico dos investimentos externos diretos; the Electronic Declaratory Registry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함. 법정 등록기간은 30일로 환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화폐유입의 경우 국내화로 환전되는 날, 또는 주식이나 지분

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기타의 경우 회사의결 행위가 행해진 날로부터 기산됨

■ 연방세무국에 외국투자가의 법인납세등록 신청(CNPJ)

- 브라질에 재산이 있거나 브라질에 투자한 외국거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모두 브라질 국세청에 개인납세인등록(Individual Taxpayers Registry, CPF)이나 법인납세인등록(General Taxpayers Registry, CNPJ)을 해야 함. (연방 국세청 명령 제 568호, Instrução Normativa No.568, 2005.9.8일) 달리 말하면 CNPJ나 CPF가 없으면 중앙은행에 외국인투자등록을 할 수 없음

■ 투자금의 송금과 중앙은행에 외국인투자금 등록

■ 주(州)세무국에 등록(ICMS)

- 설립되는 회사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 유통세(ICMS)를 내야 하기 때문에 관할기관인 주 세무국(Secretaria da Fazenda)에 등록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제출서류에 회사회계장부를 책임지는 회계사(contabilista)의 지방회계사협회(CRC, Conselho Regional de Contabilidade)의 등록번호를 적어야 함

■ 시(市) 등록(CCM)

-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회사가 주소를 두고 있는 시청 재무국(Secretaria das Finanças)에 납세인등록(CCM, Cadastro de Contribuintes Mobiliários)을 해야 함. 등록비용은 없으며 회사가 활동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30일내에 해야 함

Ⅳ. 지사(Branch) 설립

- 외국회사(foreign company)가 브라질에서 외국회사(foreign company)의 이름으로 활동하려면 연방정부의 허가 (authorization)를 취득해야 함. 외국회사가 투자가로서 브라질에 현지법인(incorporation of a Brazilian company)을 차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국회사의 이름으로 브라질에서 활동한다는 말이 되며, 그 방식은 브라질에 지사(branch)이나 연락 사무소 등을 설치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우선 연방정부(상공개발부)의 허가(Authorization)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1) 브라질 거주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2) 지사 자본금을 납입 완료해야 함. 이러한 허가기간은 보통 3~6개월가량 소요되며 최종적으로 연방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으로 발표됨. 대통령령과 기타 관련문서들은 모두 연방관보에 게재되며, 그 사본을 해당주의 상업등기소(junta comercial)에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지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임

- 지사 설립은 그 허가조건이나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현지법인에 비해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브라질에서의 지사 설립은 신중을 요하며 권장사항이 될 수 없음. 따라서 항공사 등 지점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의약품의 허가나 관리 등을 필요로 하는 업체를 제외하고 지사 형태로 브라질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은 거의 없음

- 본사의 지사에 대한 투자액은 지사에게 완전하게 이관되어야 함.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사와 지사의 책임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님. 지점은 해외본사의 연장으로 간주되어 지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본사의 자본한도까지로 연장됨

- 지사 설립에 필요한 필수 요구사항은 첫째 지사의 대표는 브라

질의 영주권을 가진 자로 지사 고유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본사로부터 위임받은 자여야 할 것, 둘째 본사는 지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운영자금을 지원해주어야 할 것 등임

- 기본적인 신청서류로는 다음의 것이 있음
  - 본사의 설립정관, 주주명부, 본사의 대차대조표, 지사 설립의 결정을 증빙하는 회사결정서(예, 주주결의문)

- 지사 설치의 경우에는 브라질연방정부, 즉 주무부서인 상공개발부(the Ministry of Development, Industry and Foreign Trade)에 신청하면 국가 상업등기과(DNRC: the National Department of Registry of Trade Activities)가 심사함. 지사 설치허가가 나오면 대통령령으로 연방관보(DOU: Federal Official Gazette)를 통해 공시됨

- 그리고 지사가 소재한 해당 주 상업등기소(JuntaComercial /Commercial Registry)에 외국법인의 지사 또는 자회사의 등록을 해야 함. 외국회사의 지사는 그 명칭 끝에 "do Brasil" 또는 'para o Brasil'이라는 접미사를 달아야 함

- 상업등기소에 등록하고 연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납세인 번호를 받은 후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본사로부터 지사 또는 자회사의 자본을 납입해야 함. 브라질법은 지사나 자회사를 해외본사의 연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브라질에 있는 지사이나 자회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외 본사도 책임을 지도록 함

Ⅴ. 조세 제도

브라질의 조세체계는 연방, 주, 시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 세금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연방세

- 수출세(IE), 수입세(II), 농지소유세(ITR), 소득세(IR), 공산품세(IPI), 금융거래세(IOF), 사회보장세, 수표세

■ 주세(州稅)

- 상품유통서비스세(ICMS), 자동차보유세(IPVA), 상속 및 증여세

■ 시세(市稅)

- 토지가옥세(IPTU), 서비스세(ISS), 유류세 등

■ 사회부담금

- 사회부담금(PIS-COFINS)은 국민의 건강이나 연금 및 약자구제를 목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고용주, 노동자,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복권 등의 부담자에 의해서 재원이 확보됨. 세액이 법인의 매출액이나 이익에 대해서 부과되고, 징수는 연방국세청이 시행하기 때문에 세금에 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사회보험 융자부담(COFINS): 모든 서비스나 상품의 총 매출액을 대상으로 하며 수출입은 과세되지 않음.

- 사회통합계획(PIS): 매출액과 제공된 서비스에서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 과세하며 수출입은 과세되지 않음

- 금융거래부담(CPMF): 현금 및 수표의 발행, 자금운용 등 당좌예금으로부터의 인출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과세됨

- 사회기부금(CSLL): 국내에 주소를 소유하는 모든 법인과 법인지위의 대우를 받는 자에게 부담의무. 부담금 표준액은, 법인세 공제하기 전 이익에 몇 가지 加算항목, 減算항목에 대해서 조정을 행한 금액으로 함

■ 기타 주요 부담금

- 사회복지원(INSS)에 대한 부담금, 근속연수 보상기금(FGTS)

<주요 세금 종류 및 세율 구분>

세금명	약자	세율	내용	구분
Imposto de Renda da Pessoa Fisica	IRPF	1257.12헤알까지 면제 1257.13헤알~2512.08헤알: 15% 2512.08헤알 이상: 27.5%	개인 소득세	연방
Imposto de Renda da Pessoa Juridica	IRPJ	15%	법인세	연방
Contribuicao ao Instituto Nacional de Seguridade Social	INSS	노동자 급여 공제 11% 고용주 부담 20%	사회복지원에 대한 부담금	연방
Imposto Predial e Territorial Urbano	IPTU	평균 1~3%	가옥세 (재산세)	시
Imposto sobre Propriedade de Veiculos Automotores	IPVA	평균 1~6% 차종과 연도에 따라 다르며 예외가 있음	자동차세	주
Contribuicao Provisoria sobre Movimentacao Finaceira	CPMF	0.38%	금융거래세 (모든 금융거래에 붙는 수수료)	연방

세금명	약자	세율	내용	구분
Imposto sobre Operacoes Financeiras	IOF	금융투자 및 신용거래: 1.5% 외환 및 보험 등: 25%	금융거래세 - 일종의 신용거래세로서 대출, 보험, 외환, 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된 세금	연방
Imposto sobre Circulacao de Mercadoria e Servicos	ICMS	평균 14% (주마다 다르고 품목마다 예외가 있음 상파울루 주의 경우 18%)	주 유통세	주
Imposto sobre Produtos Industrializados	IPI	평균 4% (품목에 따라 다름)	공산품세	연방
Imposto sobre Servicos de Qualquer Natureza	ISS 또는 ISQN	평균 1.5~5% (서비스의 종류와 시에 따라 다름)	서비스세	시
Contribuicao Social sobre o Lucro	CSSL	9%	기업의 연간 이윤에 관한 세금	연방
Salario-Educacao	-	2.5%	교육세. 직원의 급여 중 회사가 지불하는 세금	연방
Sistema "S" (Sesc, Sesi, Senai, Senac, Sebrae etc)	-	1~2.8% 기업 활동에 따라 다름	직원의 급여 중 회사가 지불하는 세금	연방

자료원: Almanaque 2007

<기업의 세율 계산>

과세 전 소득	100만 헤알	1000만 헤알
사회 기여세(9%)	9만 헤알	90만 헤알
과세 대상 소득	100만 헤알	1000만 헤알
연방 소득세		
- 총 과세대상 소득의 15%	15만 헤알	150만 헤알
- 2만 헤알 이상 과세대상소득에 대한 10%의 초과세(surtax)	9만8천 헤알	99만8천 헤알
연방 소득세 합계	24만8천 헤알	249만8천 헤알
조세부담 총계	33만8천 헤알	339만8천 헤알
총 조세부담률	33.8%	34%
과세 후 소득	66만2천 헤알	660만2천 헤알

주) 2006년 월 1백~1천만 헤알 사이의 소득을 얻는 기업의 소득세 계산 사례임.
자료원: EIU

■ 유의사항

- 브라질 투자진출 후 기업을 운영할 때 가장 곤란한 문제점의 하나가 브라질의 조세제도를 이해하는 것임. 브라질에는 80개가 넘는 조세가 있고, 조세부담률이 너무 높음. 브라질 전체 GDP의 40%를 정부가 직·간접세로 거둬들이기 때문에 브라질 국민이나 기업의 세금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과세방식이 너무 복잡하여 기업이 약간만 부주의하여도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탈세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임

- 따라서 기업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조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세무 관리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하여 관련 담당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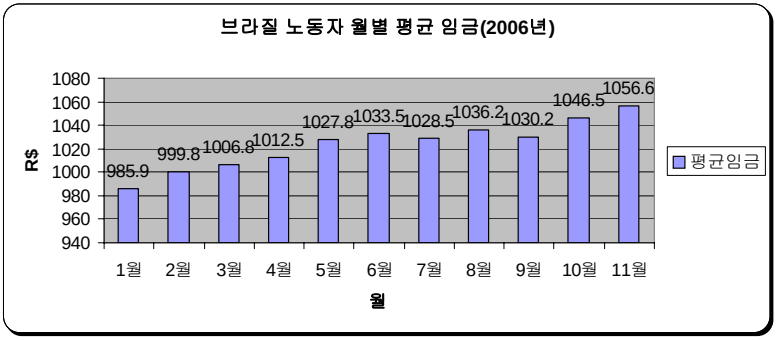
Ⅵ. 노무 관리

1. 임금

■ 임금 수준

- 브라질의 임금수준은 남미국가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업체별, 지역별, 직급별로 차이가 큰 편임. 통상 근로자에 대한 총 지출은 사회보장세, 상여금 등 월급여의 2배에 달함

- 임금협상의 경우 직종별로 노조가 있으며, 매년 노조에서 결정된 임금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브라질의 법정 최저임금은 350헤알(R$1.96/U$1)에 달하며 브라질 모든 노동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음



자료원: Suma Economica(R$1.94/U$1)

■ 퇴직금

- 근속연수 보상기금 또는 퇴직수당(FGTS: Fundo de Garantia do Tempo de Serviço)

- 모든 회사는 직원 월급여의 8%를 브라질 Caixa Economica 국책은행에 적립하는 것이 의무이며 이 적립금은 직원이 해고당할 경우 일시불로 찾을 수 있음. 고용주는 이 적립금의 50%를 벌금으로 지불하여 40%는 직원에게 지급되며 10%는 다시 정부에게 지불함

- 그러나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는 이 적립금을 퇴직시에 찾을 수 없으며 회사는 벌금 50%를 내지 않아도 됨. 따라서 브라질 노동자들은 퇴사 의사가 있을 시 이 FGTS를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라도 해고되도록 유도함에 주의

2. 노동 조건

■ 노동 시간

- 근로시간: 정상적인 주 근무시간은 44시간이고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8시간임. 화이트 컬러층은 대부분 주 40시간을 근무하며 월~금요일 근무함. 그리고 일일 근무시간은 초과근무를 포함 최대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초과근무: 기본임금의 최소 50%이상 지급. 초과근무의 최대시간은 10시간 이내에서 일일 근무량에 따라 차이가 남. 예컨대 일일 근무시간이 8시간 48분이라면(주 5일 44시간), 일일초과근무시간은 최대 1시간 12분을 초과할 수 없음

■ 휴가

- 1년 근무 후 연 30일의 유급휴가와 월급 1/3의 휴가보너스 지급 의무

• 출산 시 120일의 유급휴가 및 임신 사실을 안 이후로 출산 5개월까지 해고 불가. 부인 출산의 경우 남편은 5일간 유급 출산휴가 권리가 있음

■ 해고

• 해고의 경우 최소 30일전에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야 하며 자발적 퇴사를 제외한 회사에서 해고한 경우 그동안 적립된 FGTS 금액의 40%를 벌금으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함

3.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험

• 사회복지원에 대한 부담금(INSS: Instituto Nacional do Seguro Social)

-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 실업보험, 노령연금의 역할을 하나로 통합한 형태로 제도화되어 있음. INSS는 법인, 개인이 징수 대상이고, 고용주 부담 월 20%(월 급여 대비), 직원부담 월 8~11%(월 급여 780.79헤알 이상 11%이므로 대부분 이에 해당됨)

■ 기타

• 연말 상여금(13 salário : 13번째 월급)

- 직원 본봉의 100%를 통상 11월에 50%, 12월에 50%로 나누어 지급하여 연말 상여금이라 할 수 있으며 의무사항임

Ⅶ. 기타 정보

1.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가. 법률 사무소

■ Demarest & Almeida Advogados

- 주소: Av. Pedroso de Moraes, 1201, Centro Cultural Ohtake, Sao Paulo, SP, Brasil
- 전화: (5511)2245-1800
- 팩스: (5511)2245-1700
- 이메일: hmoon@demarest.com.br
- 홈페이지: www.demarest.com.br
- 담당자: 조희문 변호사

■ Tozzini Freire Teixeira e Silva Advogados

- 주소: R. Libero Badaro, 293, 21 andar, 01009-907,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3291-1000
- 팩스: (5511)3291-1111
- 이메일: skim@tozzini.com.br
- 홈페이지: www.tozzini.com.br
- 담당자: 김신재 변호사

■ 회계 서비스 회사
Wintec Servicos Contabeis SC Ltda.

- 주소: Rua Professor Hilario Veiga de Carvalho No. 100, Ed. Lyon, Cj. 71, Vila Suzana, CEP-05641-070, Sao Paulo, SP, Brasil

- 전화: (5511)3742-6411
- 팩스: (5511)3742-6411
- 이메일: sanokkim21@hotmail.com

2. 유관 기관

가. 공공기관

■ 駐브라질 대한민국 대사관

- 주소: Av. das Nacoes, Lote 14, Zip 70436-900, Brazilia DF, Brazil
- 전화: (5561)3321-2500
- 팩스: (5561)3321-2508

■ 상파울루 총영사관

- 주소: Av. Paulista, 37, 9 andar, Sao Paulo, SP, Brazil
- 전화: (5511)3141-1278
- 팩스: (5511)3141-1279

■ 중소기업진흥공단

- 주소: Al.Santos,1827,cj.82, Sao Paulo, Sao Paulo, SP, CEP 01419-002
- 전화: (5511)3142-9009
- 팩스: (5511)3142-9096

■ 한국수출보험공사

- 주소: Av. Paulista, 453, CJ 21, Paraiso, Sao Paulo Cep 01311-000
- 전화: (5511)3284-1105
- 팩스: (5511)3284-4081

■ 한국수출입은행

- 주소: Av. Paulista,1439, cj142, C.Cesar, Sao Paulo,SP, CEP 01311-200
- 전화: (5511)3283-3021
- 팩스: (5511)3285-3575

■ 한국산업은행

- 주소: Av. Brig.Faria Lima, 3400, Cj.152, Sao Paulo, SP, CEP 04538-132
- 전화: (5511)2138-0000
- 팩스: (5511)2138-0150

나. 교민 단체

■ 브라질 한인회

- 주소: R.dos Parecis,107, Cambuci Sao Paulo, SP 01527-030
- 전화: (5511)3209-9042, (5511)3399-2768, (5511)3208-6860
- 홈페이지: www.haninbrasil.com.br

■ 한인 상공회의소

- 주소: R.Tres Rios,263, Bom Retiro Sao Paulo, SP01123-000
- 전화: (5511) 3326-9562
- 팩스: (5511) 3326-0794
- 홈페이지: http://www.kocham.com.br

■ 브라질 한인닷컴

- 브라질 한인사회 관련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홈페이지: www.hanin.com.br

국가 개요

- 국　　명: 브라질 연방공화국
  (Repůblica Federativa))do Brasil)
- 면　　적: 8,511,965㎢ (세계 5위, 남미 대륙의 47.7%)
- 수　　도: 브라질리아(Brasilia, 236만명)
- 주요도시: 상파울루(1천81만명), 리오데자네이로(609만명), 브라질리아(236만명), 살바도르(271만명), 벨로오리존찌(240만명), 포르탈레자(241만명), 꾸리찌바(178만명), 뽀르뚜 알레그리(144만명)
- 행정구역: 26개 주, 1개 연방특구, 5,561개 시
- 인　　구: 188,54만명 (2007.4월)
- 민족구성: 백인(49.9%, 포르투갈계, 독일계, 이탈리아계, 스페인계, 폴란드계), 흑백혼혈(43.2%), 흑인(6.3%), 기타(1%)
- 언　　어: 포르투갈어(공용어) ※중남미에서 유일한 포어 사용 국가
- 종　　교: 천주교(85%), 개신교(11%), 기타 토속종교(Umbanda)등
- 화폐단위: 헤알(REAL, R$로 표기)
- 환　　율: R$ 1.94 / U$ 1 (2007.6월 기준)
- 기　　후: 북부-열대, 중부-아열대, 남부-온대
  ※연평균 기온은 23~24℃로 4계절 구분이 뚜렷하지 않음
- 시　　차: GMT - 3 (상파울루 기준, 한국보다 12시간 늦음)
  ※2월말~10월중 서머타임 실시

<부록> 투자 법령 및 관련 자료

브라질 외환 관리법 ····· 47

LEI Nº 4.131, DE 03 DE SETEMBRO DE 1962

Disciplina a aplicação do capital estrangeiro e as remessas de valores para o exterior e dá outras providências.

Art. 1º - Consideram-se capitais estrangeiros, para os efeitos desta Lei, os bens, máquinas e equipamentos entrados no Brasil sem dispêndio inicial de divisas, destinados à produção de bens ou serviços, bem como os recursos financeiros ou monetários, introduzidos no País, para aplicação em atividades econômicas, desde que, em ambas as hipóteses, pertençam a pessoas físicas ou jurídicas residentes, domiciliadas ou com sede no exterior.

Art. 2º - Ao capital estrangeiro que se investir no País será dispensado tratamento jurídico idêntico ao concedido ao capital nacional em igualdade de condições, sendo vedadas quaisquer discriminações não previstas na presente Lei.

CAPÍTULO I
DO REGISTRO DOS CAPITAIS, REMESSAS E REINVESTIMENTOS

Art. 3º - Fica instituído, no Banco Central do Brasil, um serviço especial de registro de capitais estrangeiros, qualquer que seja sua forma de ingresso no País, bem como de operações financeiras com o exterior, no qual serão registrados: (1)

a) os capitais estrangeiros que ingressarem no País sob a forma de investimento direto ou de empréstimo, quer em moeda, quer em bens;

b) as remessas feitas para o exterior como retorno de capitais ou como rendimentos desses capitais, lucros, dividendos, juros, amortizações, bem como as de "royalties", de pagamento de assistência técnica, ou por qualquer outro título que impliquem transferência de rendimentos para fora do País;

c) os reinvestimentos de lucros dos capitais estrangeiros;

d) as alterações do valor monetário do capital das empresas, procedidas de acordo com a legislação em vigor.

Parágrafo único. O registro dos reinvestimentos a que se refere a letra "c" será devido, ainda que se trate de pessoa jurídica com sede no Brasil, mas filiada a empresas estrangeiras ou controlada por maioria de ações pertencentes a pessoas físicas ou jurídicas com residência ou sede no estrangeiro.

(Onde se lê Banco Central do Brasil, conforme o art. 8º da Lei 4595/64 c/c art. 1º do DL 278/67, era lido originalmente Superintendência da Moeda e do Crédito - SUMOC).

Art. 4º - O registro de capitais estrangeiros será efetuado na moeda do país de origem, e o do reinvestimento de lucros, simultaneamente em moeda nacional e na moeda do país para o qual poderiam ter sido remetidos, realizada a conversão à taxa cambial média do período durante o qual foi comprovadamente efetuado o reinvestimento. (1)

Parágrafo único - Se o capital for representado por bens, o registro será feito pelo seu preço no país de origem ou, na falta de comprovantes satisfatórios, segundo os valores apurados na contabilidade da empresa receptora do capital ou ainda pelo critério de avaliação que for determinado pelo regulamento.

Art. 5º - O registro do investimento estrangeiro será requerido dentro de 30 (trinta) dias da data de seu ingresso no País e independente do pagamento de qualquer taxa ou emolumento. No mesmo prazo, a partir da data da aprovação do respectivo registro contábil pelo órgão competente da empresa, proceder-se-á ao registro dos reinvestimentos de lucros.

§ 1º - Os capitais estrangeiros e respectivos reinvestimentos de lucros já existentes no País também estão sujeitos a registro, o qual será requerido por seus proprietários ou responsável pelas empresas em que estiverem aplicados, dentro do prazo de 180 (cento e oitenta) dias da data da publicação desta Lei. (1)

§ 2º - O Conselho Monetário Nacional determinará quais os comprovantes a serem exigidos para concessão do registro dos capitais de que trata o parágrafo anterior. (2)

(Onde se lê Conselho Monetário Nacional (CMN), conforme o art. 2º da Lei 4595/64, era lido originalmente Conselho da Superintendência da Moeda e do Crédito).
Art. 6º - O Banco Central do Brasil tomará as providências necessárias para que o registro dos dados a que se referem os artigos anteriores seja mantido atualizado, ficando as empresas obrigadas a prestar as informações que ela lhes solicitar.
(Onde se lê Banco Central do Brasil, conforme o art. 8º da Lei 4595/64 c/c art. 1º do DL 278/67, era lido originalmente Superintendência da Moeda e do Crédito - SUMOC).
Art. 7º - Consideram-se reinvestimentos, para os efeitos desta Lei, os rendimentos auferidos por empresas estabelecidas no País e atribuídos a residentes e domiciliados no exterior e que forem reaplicados nas mesmas empresas de que procedem ou em outro setor da economia nacional. (1)

CAPÍTULO II
DAS REMESSAS DE JUROS, "ROYALTIES"
E POR ASSISTÊNCIA TÉCNICA
Art. 8º - As remessas de juros de empréstimos, créditos e financiamentos serão consideradas como amortização de capital na parte que excederem da taxa de juros constante do contrato respectivo e de seu respectivo registro, cabendo ao Banco Central do Brasil impugnar e recusar a parte da taxa que exceder a taxa vigorante no mercado financeiro de onde procede o empréstimo, crédito ou financiamento, na data de sua realização, para operações do mesmo tipo e condições.
(Onde se lê Banco Central do Brasil, conforme o art. 8º da Lei 4595/64 c/c art. 1º do DL 278/67, era lido originalmente Superintendência da Moeda e do Crédito - SUMOC).
Art. 9º - As pessoas físicas e jurídicas que desejarem fazer transferências para o exterior a título de lucros, dividendos, juros, amortizações, "royalties", assistência técnica, científica, administrativa e semelhantes deverão submeter aos órgãos competentes do Banco Central do Brasil e da Secretaria da Receita Federal os contratos e documentos que forem considerados necessários para justificar a remessa. (1)
§ 1º - As remessas para o exterior dependem do registro da empresa no Banco Central do Brasil e de prova de pagamento do Imposto de Renda que for devido. (2)
§ 2º - Em casos de registros requeridos e ainda não concedidos nem denegados, a realização das transferências de que trata este artigo poderá ser feita dentro de 1(um) ano, a partir da data desta Lei, mediante termo de responsabilidade assinado pelas empresas interessadas, prazo este prorrogável 3 (três) vezes consecutivas, por ato do Presidente da República, em face da exposição do Ministro da Fazenda. (3)
§ 3º - No caso previsto pelo parágrafo anterior, as transferências sempre dependerão de prova de quitação do Imposto de Renda. (3)
(Onde se lêem Banco Central do Brasil, conforme o art. 8º da Lei 4595/64 c/c art. 1º do DL 278/67, e Secretaria da Receita Federal eram lidos originalmente e respectivamente Superintendência da Moeda e do Crédito e Divisão de Imposto Sobre a Renda).
Art. 10 - O Banco Central do Brasil poderá, quando considerar necessário, verificar a assistência técnica, administrativa ou semelhante, prestada a empresas estabelecidas no Brasil, que impliquem remessa de divisas para o exterior, tendo em vista apurar a efetividade dessa assistência. (1)
(Onde se lê Banco Central do Brasil, conforme o art. 8 da Lei 4595/64 c/c o art. 1 do DL 278/67, era lido originalmente Superintendência da Moeda e do Crédito - SUMOC).
Art. 11 - Os pedidos de registro de contrato, para efeito de transferências financeiras para o pagamento de "royalties" devidos pelo uso de patentes, marcas de indústria e de comércio ou outros títulos da mesma espécie serão instruídos com certidão probatória da existência e vigência, no Brasil, dos respectivos privilégios concedidos pelo Instituto Nacional da Propriedade Industrial, bem como de documento hábil probatório de que eles não caducaram no país de origem. (1)

(Onde se lê Instituto Nacional da Propriedade Industrial era lido, na redação dada pela Lei 4390/64, Departamento Nacional de Propriedade Industrial).
Art. 12 - As somas das quantias devidas a título de "royalties" pela exploração de patentes de invenção, ou uso de marca de indústria e de comércio e por assistência técnica, científica, administrativa ou semelhante, poderão ser deduzidas, nas declarações de renda, para efeito do art. 37 do Decreto nº 47.373, de 7 de dezembro de l959, até o limite máximo de 5% (cinco por cento) da receita bruta do produto fabricado ou vendido. (1)
§ 1º - Serão estabelecidos e revistos periodicamente, mediante ato do Ministro da Fazenda, os coeficientes percentuais admitidos para as deduções a que se refere este artigo, considerados os tipos de produção ou atividades reunidos em grupos, segundo o grau de essencialidade.
§ 2º - As deduções de que este artigo trata serão admitidas quando comprovadas as despesas de assistência técnica, científica, administrativa ou semelhantes, desde que efetivamente prestados tais serviços, bem como mediante o contrato de cessão ou licença de uso de marcas e de patentes de invenção, regularmente registrado no País, de acordo com as prescrições do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 3º - As despesas de assistência técnica, científica, administrativa e semelhantes somente poderão ser deduzidas nos 5 (cinco) primeiros anos de funcionamento da empresa ou da introdução de processo especial de produção, quando demonstrada sua necessidade, podendo este prazo ser prorrogado até mais 5 (cinco) anos, por autorização do Conselho Monetário Nacional.
Art. 13 - Serão consideradas como lucros distribuídos e tributados, de acordo com os arts. 43 e 44, as quantias devidas a título de "royalties" pela exploração de patentes de invenção e por assistência técnica, científica, administrativa ou semelhante, que não satisfizerem as condições ou excederem os limites previstos no artigo anterior. (1)
Parágrafo único - Também será tributado de acordo com os arts. 43 e 44 o total das quantias devidas a pessoas físicas ou jurídicas residentes ou sediadas no exterior, a título do uso de marcas de indústria e de comércio.
Art. 14 - Não serão permitidas remessas para pagamento de "royalties", pelo uso de patentes de invenção e de marcas de indústria ou de comércio, entre filial ou subsidiária de empresa estabelecida no Brasil e sua matriz com sede no exterior, ou quando a maioria do capital da empresa no Brasil pertença aos titulares do recebimento dos "royalties" no estrangeiro.
Parágrafo único - Nos casos de que trata este artigo não é permitida a dedução prevista no art. 12. (1)
Art. 15 - (REVOGADO) (1)
Art. 16 - Fica o Governo autorizado a celebrar acordos de cooperação administrativa com países estrangeiros, visando ao intercâmbio de informações de interesse fiscal e cambial, tais como remessa de lucros e "royalties", pagamento de serviços de assistência técnica e semelhantes, valor de bens importados, alugueres de filmes cinematográficos, máquinas etc., bem como de quaisquer outros elementos que sirvam de base à incidência de tributos.
Parágrafo único - O Governo procurará celebrar com os Estados e Municípios acordos ou convênios de cooperação fiscal, visando a uma ação coordenada dos controles fiscais exercidos pelas repartições federais, estaduais e municipais, a fim de alcançar maior eficiência na fiscalização e arrecadação de quaisquer tributos e na repressão à evasão e sonegação fiscais.

CAPÍTULO III
DOS BENS E DEPÓSITOS NO EXTERIOR E DAS NORMAS DE CONTABILIDADE

Art. 17 - (REVOGADO) (1)
Art. 18 - (REVOGADO) (1)

Art. 19 - (REVOGADO) (1)
Art. 20 - Por ato regulamentar, o Poder Executivo estabelecerá planos de contas e normas gerais de contabilidade, padronizadas para grupos homogêneos de atividades adaptáveis às necessidades e possibilidades das empresas de diversas dimensões.
Parágrafo único - Aprovados, por ato regulamentar, o plano de contas e as normas gerais contábeis a elas aplicáveis, todas as pessoas jurídicas do respectivo grupo de atividades serão obrigadas a observá-los em sua contabilidade, dentro dos prazos previstos em regulamento, que deverão permitir a adaptação ordenada dos sistemas em prática.
Art. 21 - É obrigatória, nos balanços das empresas, inclusive sociedades anônimas, a discriminação da parcela de capital e dos créditos pertencentes a pessoas físicas ou jurídicas residentes, domiciliadas ou com sede no exterior, registrados no Banco Central do Brasil.
(Onde se lê Banco Central do Brasil, conforme o art. 8º da Lei 4595/64 c/c art. 1º do DL 278/67, era lido originalmente Superintendência da Moeda e do Crédito - SUMOC).
Art. 22 - Igual discriminação será feita na conta de lucros e perdas, para evidenciar a parcela de lucros, dividendos, juros e outros quaisquer proventos atribuídos a pessoas físicas ou jurídicas residentes, domiciliadas ou com sede no estrangeiro cujos capitais estejam registrados no Banco Central do Brasil.
(Onde se lê Banco Central do Brasil, conforme o art. 8º da Lei 4595/64 c/c art. 1º do DL 278/67, era lido originalmente Superintendência da Moeda e do Crédito - SUMOC).
Art. 23 - As operações cambiais no mercado de taxa livre serão efetuadas através de estabelecimentos autorizados a operar em câmbio, com a intervenção de corretor oficial quando previsto em lei ou regulamento, respondendo ambos pela identidade do cliente, assim como pela correta classificação das informações por este prestadas, segundo normas fixadas pelo Banco Central do Brasil.
§ 1º - As operações que não se enquadrem claramente nos itens específicos do Código de Classificação adotado pelo Banco Central do Brasil, ou sejam classificáveis em rubricas residuais, como "Outros" e "Diversos", só poderão ser realizadas através do Banco do Brasil S.A.
§ 2º - Constitui infração imputável ao estabelecimento bancário, ao corretor e ao cliente, punível com multa de 50 (cinqüenta) a 300% (trezentos por cento) do valor da operação para cada um dos infratores, a declaração de falsa identidade no formulário que, em número de vias e segundo o modelo determinado pelo Banco Central do Brasil, será exigido em cada operação, assinado pelo cliente e visado pelo estabelecimento bancário e pelo corretor que nela intervierem. (1)
§ 3º - Constitui infração, de responsabilidade exclusiva do cliente, punível com multa de 5(cinco) a 100% (cem por cento) do valor da operação, a declaração de informações falsas no formulário a que se refere o § 2º. (1)
§ 4º - Constitui infração, imputável ao estabelecimento bancário e ao corretor que intervierem na operação, punível com multa equivalente de 5 (cinco) a l00% (cem por cento) do respectivo valor, para cada um dos infratores, a classificação incorreta, dentro das normas fixadas pelo Conselho Monetário Nacional, das informações prestadas pelo cliente no formulário a que se refere o § 2º deste artigo.
§ 5º - Em caso de reincidência, poderá o Conselho Monetário Nacional cassar a autorização para operar em câmbio aos estabelecimentos bancários que negligenciarem o cumprimento do disposto no presente artigo e propor à autoridade competente igual medida em relação aos corretores.
§ 6º - O texto do presente artigo constará obrigatoriamente do formulário a que se refere o § 2º.
(Onde se lê Conselho Monetário Nacional (CMN), conforme o art. 2º da Lei 4595/64, era lido originalmente Conselho da Superintendência da Moeda e do Crédito).

(Onde se lê Banco Central do Brasil, conforme o art. 8º da Lei 4595/64 c/c art. 1º do DL 278/67, era lido originalmente Superintendência da Moeda e do Crédito - SUMOC).

Art. 24 - Cumpre aos estabelecimentos bancários autorizados a operar em câmbio transmitir ao Banco central do Brasil, diariamente, informações sobre o montante de compra e venda de câmbio, com a especificação de suas finalidades, segundo a classificação estabelecida.
Parágrafo único - Quando os compradores ou vendedores de câmbio forem pessoas jurídicas, as informações estatísticas devem corresponder exatamente aos lançamentos contábeis correspondentes, destas empresas.
(Onde se lê Banco Central do Brasil, conforme o art. 8º da Lei 4595/64 c/c art. 1º do DL 278/67, era lido originalmente Superintendência da Moeda e do Crédito - SUMOC).
Art. 25 - Os estabelecimentos bancários que deixarem de informar o montante exato das operações realizadas ficarão sujeitos à multa até o máximo correspondente a 30 (trinta) vezes o maior salário-mínimo anual vigorante no País, triplicada no caso de reincidência. (1)
Parágrafo único - A multa será imposta pelo Banco Central do Brasil, cabendo recurso de seu ato, sem efeito suspensivo, para o Conselho de Recursos do Sistema Financeiro Nacional, dentro do prazo de 15 (quinze) dias da data da intimação. (2)
(Onde se lê Banco Central do Brasil, conforme o art. 8º da Lei 4595/64 c/c art. 1º do DL 278/67, era lido originalmente Superintendência da Moeda e do Crédito - SUMOC).

(Onde se lê Conselho de Recursos do Sistema Financeiro Nacional, conforme o art. 2º da Lei 4595/64 c/c art. 81 da Lei 9069/95, era lido originalmente Conselho da Superintendência da Moeda e do Crédito e posteriormente Conselho Monetário Nacional).
Art. 26 - No caso de infrações repetidas, o Banco Central do Brasil proporá o cancelamento da autorização para operar em câmbio do estabelecimento bancário por elas responsável, cabendo a decisão final ao Conselho Monetário Nacional. (1)
(Onde se lê Conselho Monetário Nacional (CMN), conforme o art. 2º da Lei 4595/64, era lido originalmente Conselho da Superintendência da Moeda e do Crédito).

(Onde se lê Banco Central do Brasil, conforme o art. 8º da Lei 4595/64 c/c art. 1º do DL 278/67, era lido originalmente Superintendência da Moeda e do Crédito - SUMOC).
Art. 27 - O Conselho Monetário Nacional poderá determinar que as operações cambiais referentes a movimentos de capital sejam efetuadas, no todo ou em parte, em mercado financeiro de câmbio, separado do mercado de exportação e importação, sempre que a situação cambial assim o recomendar. (1)
(Onde se lê Conselho Monetário Nacional (CMN), conforme o art. 2º da Lei 4595/64, era lido originalmente Conselho da Superintendência da Moeda e do Crédito).
Art. 28 - Sempre que ocorrer grave desequilíbrio no balanço de pagamentos, ou houver sérias razões para prever a iminência de tal situação, poderá o Conselho Monetário Nacional impor restrições, por prazo limitado, à importação e às remessas de rendimentos dos capitais estrangeiros e, para este fim, outorgar ao Banco do Brasil monopólio total ou parcial das operações de câmbio. (1)
§ 1º - No caso previsto neste artigo, ficam vedadas as remessas a título de retorno de capitais e limitada a remessa de seus lucros, até 10% (dez por cento) ao ano, sobre o capital e reinvestimentos registrados na moeda do país de origem, nos termos dos arts. 3º e 4º desta Lei.
§ 2º - Os rendimentos que excederem a percentagem fixada pelo Conselho Monetário Nacional, de acordo com o parágrafo anterior, deverão ser comunicados ao Banco Central do Brasil, a qual, na hipótese de se prolongar por mais de um exercício a restrição a que se refere este artigo, poderá autorizar a remessa, no exercício seguinte, das quantias relativas ao excesso, quando os lucros nele auferidos não atingirem aquele limite.
§ 3º - Nos mesmos casos deste artigo, poderá o Conselho Monetário Nacional limitar a remessa de quantias a título de pagamentos de "royalties" e assistência técnica,

administrativa ou semelhante até o limite máximo cumulativo, anual, de 5% (cinco por cento) da receita bruta da empresa.
§ 4º - Ainda nos casos deste artigo, fica o Conselho Monetário Nacional autorizado a baixar instruções limitando as despesas cambiais com "Viagens Internacionais".
§ 5º - Não haverá, porém, restrições para as remessas de juros e quotas de amortização, constantes de contratos de empréstimo, devidamente registrados.
(Onde se lê Conselho Monetário Nacional (CMN), conforme o art. 2º da Lei 4595/64, era lido originalmente Conselho da Superintendência da Moeda e do Crédito).

(Onde se lê ...comunicados a esse Banco Central era lido originalmente ...comunicados a essa Superintendência).
Art. 29 - Sempre que se tornar aconselhável economizar a utilização das reservas de câmbio, é o Poder Executivo autorizado a exigir temporariamente, mediante Instrução do Conselho Monetário Nacional, um encargo financeiro, de caráter estritamente monetário, que recairá sobre a importação de mercadorias e sobre as transferências financeiras, até o máximo de 10% (dez por cento) sobre o valor dos produtos importados e até 50% (cinqüenta por cento) sobre o valor de qualquer transferência financeira, inclusive para despesas com "Viagens Internacionais". (1)
Parágrafo único - (REVOGADO) (2)
(Onde se lê Conselho Monetário Nacional (CMN), conforme o art. 2º da Lei 4595/64, era lido originalmente Conselho da Superintendência da Moeda e do Crédito).
Art. 30 - As importâncias arrecadadas por meio do encargo financeiro, previsto no artigo anterior, constituirão reserva monetária em Reais, mantida no Banco Central do Brasil, em caixa própria, e será utilizada, quando julgado oportuno, exclusivamente na compra de ouro e de divisas, para reforço das reservas e disponibilidades cambiais. (1)
(Onde se lê Banco Central do Brasil, conforme o art. 8º da Lei 4595/64 c/c art. 1º do DL 278/67, era lido originalmente Superintendência da Moeda e do Crédito - SUMOC).

(Onde se lê reserva monetária em reais era lido reserva monetária em cruzeiros).
Art. 31 - (REVOGADO) (1)
Art. 32 - (REVOGADO) (1)
Art. 33 - (REVOGADO) (1)
Art. 34 - Em qualquer circunstância e qualquer que seja o regime cambial vigente não poderão ser concedidas às compras de câmbio para remessa de lucros, juros, "royalties", assistência técnica, retorno de capitais, condições mais favoráveis do que as que se aplicarem às remessas para pagamento de importações de categoria geral de que trata a Lei nº 3.244, de 14/08/57.
Art. 35 - A nomeação dos titulares dos órgãos que integram o Conselho Monetário Nacional passa a depender de prévia aprovação do Senado Federal, excetuada a dos Ministros de Estado.
(Onde se lê Conselho Monetário Nacional (CMN), conforme o art. 2º da Lei 4595/64, era lido originalmente Conselho da Superintendência da Moeda e do Crédito).
Art. 36 - Os membros do Conselho Monetário Nacional ficam obrigados a fazer declaração de bens e rendas próprias e de suas esposas e dependentes, até 30 (trinta) dias de abril de cada ano, devendo estes documentos ser examinados e arquivados no Tribunal de Contas da União, que comunicará o fato ao Senado Federal.
Parágrafo único - Os servidores do Banco Central do Brasil que tiverem responsabilidade e encargos regulamentares nos trabalhos relativos ao registro de capitais estrangeiros ou de sua fiscalização nos termos desta Lei, ficam igualmente obrigados à declaração de bens e rendas prevista neste artigo.
(Onde se lê Conselho Monetário Nacional (CMN), conforme o art. 2 Lei 4595/64, era lido originalmente Conselho da Superintendência da Moeda e do Crédito).

(Onde se lê Banco Central do Brasil, conforme o art. 8 da Lei 4595/64 c/c art. 1 do

DL 278/67, era lido originalmente Superintendência da Moeda e do Crédito - SUMOC).

CAPÍTULO IV
DISPOSIÇÕES REFERENTES AO CRÉDITO
Art. 37 - O Tesouro Nacional e as entidades oficiais de crédito público da União e dos Estados, inclusive sociedades de economia mista por eles controladas, só poderão garantir empréstimos, créditos ou financiamentos obtidos no exterior, por empresas cuja maioria de capital com direito a voto pertença a pessoas não residentes no País, mediante autorização em decreto do Poder Executivo.
Art. 38 - As empresas com maioria de capital estrangeiro, ou filiais de empresas sediadas no exterior, não terão acesso ao crédito das entidades e estabelecimentos mencionados no artigo anterior até o início comprovado de suas operações, excetuados projetos considerados de alto interesse para a economia nacional. (1)
Art. 39 - As entidades, estabelecimentos de crédito, a que se refere o art. 37, só poderão conceder empréstimos, créditos ou financiamentos para novas inversões a serem realizadas no ativo fixo da empresa cuja maioria de capital, com direito a voto, pertença a pessoas não residentes no País, quando elas estiverem aplicadas em setores de atividades e regiões econômicas de alto interesse nacional, definidos e enumerados em decreto do Poder Executivo. (1)
Parágrafo único - Também a aplicação de recursos provenientes de fundos públicos de investimentos, criados por lei, obedecerá à regra estabelecida neste artigo.
Art. 40 - As sociedades de financiamentos e de investimentos somente poderão colocar no mercado nacional de capitais ações e títulos emitidos pelas empresas controladas por capital estrangeiro, ou subordinadas a empresas com sede no estrangeiro, que tiverem assegurado o direito de voto.

CAPÍTULO V
DISPOSITIVOS FISCAIS
Art. 41 - Estão sujeitos aos descontos de Imposto de Renda na fonte, nos termos da presente Lei, os seguintes rendimentos:
a) os dividendos de ações ao portador e quaisquer bonificações a elas atribuídas;
b) os interesses e quaisquer outros rendimentos e proventos de títulos ao portador, denominados "Partes Beneficiárias" ou "Partes de Fundador";
c) os lucros, dividendos e quaisquer outros benefícios e interesses de ações nominativas ou de quaisquer títulos nominativos do capital de pessoas jurídicas, percebidos por pessoas físicas ou jurídicas residentes, domiciliadas ou com sede no exterior, ou por filiais ou subsidiárias de empresas estrangeiras.
Art. 42 - As pessoas jurídicas que tenham predominância de capital estrangeiro, ou sejam filiais ou subsidiárias de empresas com sede no exterior, ficam sujeitas às normas e às alíquotas do Imposto de Renda estabelecidas na legislação deste tributo.
Art. 43 - O montante dos lucros e dividendos líquidos relativos a investimentos em moeda estrangeira, distribuídos a pessoas físicas e jurídicas, residentes ou com sede no exterior, fica sujeito a um imposto suplementar de renda, sempre que a média das distribuições em um triênio, encerrado a partir de l984, exceder a 12% (doze por cento) do capital e reinvestimentos registrados nos termos dos artigos 3º e 4º desta Lei. (1)
§ 1º - O imposto suplementar de que trata este artigo será cobrado de acordo com a seguinte tabela:
- Entre 12% (doze por cento) e 15% (quinze por cento) de lucros sobre capital e reinvestimento - 40% (quarenta por cento);
- Entre 15% (quinze por cento) e 25% (vinte e cinco por cento)de lucros - 50% (cinqüenta por cento);
- Acima de 25% (vinte e cinco por cento) de lucros - 60% (sessenta por cento).

§ 2º - O disposto neste artigo não se aplica aos dividendos e lucros reinvestidos no País nos termos do artigo 7º desta Lei.
§ 3º - O imposto suplementar será recolhido pela fonte pagadora e debitado ao beneficiário para desconto por ocasião das distribuições subsequentes. (1)
Art. 44 - (REVOGADO) (1)
Art. 45 - (REVOGADO) (1)
Art. 46- Os lucros provenientes da venda de propriedades imóveis, inclusive da cessão de direitos, quando o proprietário for pessoa física ou jurídica residente ou com sede no exterior, ficam sujeitos a imposto, às taxas previstas pelo art. 43.
Art. 47 - Os critérios fixados para a importação de máquinas e equipamentos usados serão os mesmos, tanto para os investidores e empresas estrangeiras como para os nacionais.
Art. 48 - Autorizada uma importação de máquinas e equipamentos usados, gozará de regime cambial idêntico ao vigorante para a importação de máquinas e equipamentos novos.
Art. 49 - O Conselho de Política Aduaneira disporá da faculdade de reduzir ou de aumentar, até 30% (trinta por cento), as alíquotas do imposto que recaiam sobre máquinas e equipamentos, atendendo às peculiaridades das regiões a que se destinam, à concentração industrial em que venham a ser empregados e ao grau de utilização das máquinas e equipamentos, antes de efetivar-se a importação.
Parágrafo único - Quando as máquinas e equipamentos forem transferidos da região a que inicialmente se destinavam, deverão os responsáveis pagar ao fisco a quantia correspondente à redução do imposto de que elas gozaram quando de sua importação, sempre que removidas para zonas em que a redução não seria concedida.

CAPÍTULO VI
OUTRAS DISPOSIÇÕES
Art. 50 - Aos bancos estrangeiros autorizados a funcionar no Brasil serão aplicadas as mesmas vedações ou restrições equivalentes às que a legislação vigorante nas praças em que tiverem sedes suas matrizes impõe aos bancos brasileiros que nelas desejam estabelecer-se.
Parágrafo único - O Conselho Monetário Nacional baixará as instruções necessárias para que o disposto no presente artigo seja cumprido, no prazo de 2 (dois) anos, em relação aos bancos estrangeiros já em funcionamento no País.
(Onde se lê Conselho Monetário Nacional (CMN), conforme o art. 2º da Lei 4595/64, era lido originalmente Conselho da Superintendência da Moeda e do Crédito).
Art. 51 - Aos bancos estrangeiros cujas matrizes tenham sede em praças em que a legislação imponha restrições ao funcionamento de bancos brasileiros, fica vedado adquirir mais de 30% (trinta por cento) das ações, com direito a voto, de bancos nacionais.
Art. 52 - REVOGADO TACITAMENTE. (1)
Art. 53 - REVOGADO TACITAMENTE. (1)
Art. 54 - REVOGADO TACITAMENTE. (1)
Art. 55 - O Banco Central do Brasil realizará, periodicamente, em colaboração com o Instituto Brasileiro de Geografia e Estatística, o censo dos capitais estrangeiros aplicados no País.
(Onde se lê Banco Central do Brasil, conforme o art. 8º da Lei 4595/64 c/c o art. 1º do DL 278/67, era lido originalmente Superintendência da Moeda e do Crédito - SUMOC).
Art. 56- Os censos deverão realizar-se nas datas dos Recenseamentos Gerais do Brasil, registrando a situação das empresas e capitais estrangeiros em 3l de dezembro do ano anterior.
Art. 57 - Caberá ao Banco Central do Brasil elaborar o plano e os formulários do censo a que se referem os artigos anteriores, de modo a permitir uma análise completa da situação, movimentos e resultados dos capitais estrangeiros.

Parágrafo único - REVOGADO TACITAMENTE. (1)

(Onde se lê Banco Central do Brasil, conforme o art. 8º da Lei 4595/64 c/c o art. 1º do DL 278/67, era lido originalmente Superintendência da Moeda e do Crédito - SUMOC).

Art. 58 - As infrações à presente Lei, ressalvadas as penalidades específicas constantes de seu texto, ficam sujeitas a multas de até R$ 100.000,00 (cem mil reais), a serem aplicadas pelo Banco Central do Brasil, na forma prescrita em regulamento a ser baixado pelo Conselho Monetário Nacional. (1)

Brasília, 03 de setembro de 1962;
141º da Independência e 74º da República.
AURO MOURA ANDRADE